총인시설 심사 돈거래 드러나나

광주지검, 시공사 대림산업 본사 압수수색

일부 위원 출금… 신병처리 임박 전망도

검찰이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심사위원들의 돈 거래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수사로 민선 5기 광주시의 최대 규모 사업인 총인저감시설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의 부적절성이 드러날 경우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도 클 수밖에 없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광주시 총인저감시설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는 대림산업의 광주·전남 현장사무소에 이어 최근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림산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건설사 2곳도 압수수색했으며 관련 기업 임직원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까지 불러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특히 검찰은 광주시 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9명과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 6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대림산업 컨소시엄을 적격업체로 선정한 만큼 이들이 대림산업 및 컨소시엄 참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이미 출국금지된 상태로 조만간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총인저감시설 발주처인 광주시 및 관련 공무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명단과 점수가 공개되는데 심사위원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을 리는 없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림건설 컨소시엄이 공사중인 총인저감시설의 공사진척률은 38.6%이며, 기계 발주도 끝나 공사는 사실상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사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금품로비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진정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총사업비 982억원의 광주시 총인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지난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됐으며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1순위 사업자에 선정됐었다. 이후 광주시가 특정 업체에 좋은 점수를 준 설계심사 분과위원 7명(공무원 5명 포함)을 전격 해촉했고,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이 입찰 심사에 참여한 시청 공무원과 대림산업 관계자 등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이미 거론됐던 문제들을 최대한 신속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총인저감시설=하천, 호소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적조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인의 총량을 줄이는 시설. 광주시가 설치하고 있는 총인저감시설은 방류되는 물의 총인 허용치를 ℓ당 2㎎에서 0.3㎎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봄철 산불예방 책임집니다" 30일 광주시 북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에서 진화대원들이 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보해저축銀서 뇌물수수 금감원 간부 집유

檢 "일부 무죄 인정 못해 항소"

광주지방검찰청이 뇌물수수(일부 예비적 죄명 뇌물 약속)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김모(4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30일 "1심 재판부에서 승용차 수수와 관련한 뇌물수수 부분 등에 관해 김씨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인정할 수 없어 1심 판결이 끝난 금감원 직원 중 유일하게 김씨에 대해서만 항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김씨에 대해 보해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8곳에 부탁해 자신의 아내가 22억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수당으로 1450만1959만원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보해저축은행 법인차량을 시세보다 싼 900만원에 구입한 뒤 매매대금을 다시 되돌려받기로 한 협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최근 김씨의 처가 경제적인 이익은 볼 수 있으나 그 가액을 산정할 증거를 찾기 어려우며, 김씨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되돌려줬다는 전 보해저축은행 은행장 오문철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되돌려 받기로 약속했는지 여부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들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방위병으로 5·18 참여 3명 재심서 '무죄'

광주지법

군 복무 중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3명에 대해 법원이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용배)는 30일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해 실형을 선고받은 이모(53)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1980년 나주 등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중 5월18일부터 광주 일원 대학생을 중심으로 계엄해제 가두시위가 계속되자 당시 군부의 무력 진압에 맞서기 위해 갈빈 소총을 받아 시민군 기동타격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립교원 공립특채 비리 여지 많다"

폐교·학교감축 이유 채용 32% 불과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은 30일 "사립학교 교사 중 공립학교에 근무할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현행 사립교원 공립특채 제도는 각종 비리나 특혜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6개 시도교육청이 2007~2011년간 공립특채한 사립교원 1013명 중 폐교나 폐과, 학급감축 등 사유로 인한 경우는 328명(32.3%)에 불과하며 나머지 685명은 모두 '기타'로 분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타' 사유로는 대체로 '우수교사', '공사립 교류', '취업보호대상자', '민주화운동관련자' 등이 제시됐고, '근무경력 3년 이상', '사립교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라고만 기록된 경우도 상당수였다.

실제 지난해 12월 광주시 교육청은 특정 사립학교 과원해소 명목으로 5명을 공립으로 특채했으나, 이 과정에서 탈락자를 바꿔치기해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물의를 빚었었다.

교과부 감사결과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특정학교 교원에 대한 특채를 진행한 배경과 불투명한 채용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었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특채가 이뤄질 경우 각종 비리나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만취 상태 강도 당했다"

30대 신고에 경찰 수사

만취 상태에서 괴한에게 폭행을 당한 뒤 지갑을 빼앗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정모(31)씨가 이날 새벽 광주시 서구 치평동 인근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도중 자신의 승용차에서 괴한에게 폭행한 당한 뒤 신용카드 2장을 빼앗겼다고 신고했다.

정씨는 "만취 상태에서 귀가해 일어나 보니 얼굴에 멍이 들고, 지갑이 사라졌다"며 이날 오전 8시께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이날 새벽 5시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한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한 남성이 정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50여만원을 인출한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 사진 1장을 확보했다. 하지만 정씨가 만취 상태에서 피해를 당해 정확한 발생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사이버 학교폭력 '꼼짝마'

광주경찰 SNS전담반 구성 욕설·협박 등 괴롭힘 근절

광주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 SNS(Social Network Service) 전담반을 구성했다. 실시간으로 학교폭력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버상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신속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광주경찰청은 30일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학교폭력 게시글을 통한 신속 대응, 청소년과의 1대1 예방교육 등을 목적으로 사이버 안전드림(Dream)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안전드림팀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5개 경찰서 인원 등 18명으로 구성되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사이버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한다. 경찰은 SNS로 학생들과 '친구 맺기'로 쌍방향 의사 소통을 하고 사이버상 집단따돌림 목적 게시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학생들이 신변보호가 가능한 SNS의 '다이렉트 메시지', '쪽지 보내기' 등의 문자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싸이월드 미니 홈피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글이 발견될 경우 통신사가 해당 글을 보관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방안도 협의중이다.

광주경찰청 국승인 사이버수사대장은 "학생들 사이에 휴대폰 보급이 일상화되면서 야간이나 수업시간까지도 문자를 통한 욕설, 협박 등의 폭력이 발생해 성적 하락은 물론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며 "학생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

졸업식 '폭력 뒤풀이' 단속

광주지방경찰청은 30일 "2월 1일부터 18일까지 경찰 기동대를 각급 학교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졸업식 당일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주시교육청이 요청한 64개 학교에서 담당 교사와 함께 순찰활동을 펼치고 교외에서 뒤풀이가 예상되는 49곳은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순찰할 방침이다.

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뒤풀이에 대해 가해 학생은 물론, 단순 가담자도 처벌한다.

폭행을 하거나 돈을 빼앗는 행위는 물론,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으로 처벌하고 단체로 옷을 벗고 알몸으로 거리를 지나다니는 것도 경범죄로 처벌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동교동 24시' 함윤식 전두환 상대 손배소

과거 유신시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던 함윤식(69)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함씨는 "나와 가족에게 모두 9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함씨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1980년 김대중 당시 국민연합 공동의장 집에서 나를 불법 체포한 뒤 고문·협박·회유를 통해 허위 공소사실을 만들어 기소했다"며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고 사면된 데 이어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그동안 나와 가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함씨는 198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책 '동교동24시'를 펴낸 바 있다. /연합뉴스

이삿짐 차량 동원 헤어진 남친 금품 훔쳐

쌍나팔

○…이삿짐센터 차량까지 동원해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이 경찰서행.

○…30일 광주광산경찰에 절도 혐의로 입건된 최모(여·31)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모 아파트 고모(35)씨의 집에서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 25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가구를 훔쳤다는 것.

○…경찰은 "최씨가 남자친구인 고씨와 헤어지게 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삿짐센터 차량을 이용해 주변의 의심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귀띔.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대학편입 정원 대폭증가!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졸업시기	3학년입학 / 2년재학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준비과목	영어(인문) / 영어,수학(자연)
각 군별 1회 지원	복수지원	대학별 지원(최다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2월1일